

"상생협력 · 공공갈등관리 주요정부정책 추진방향"

이재철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서기관

최근 대부분의 갈등이 단순 사안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며, 당사자간 갈등에서 다자간 갈등·분쟁으로,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모두가 Win Win'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만큼, 갈등·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히 분쟁이 현재화 된 후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중재 및 조정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주요한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정책을 보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05. 5 국회제출),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운영(11인 이내, 민간위원 2/3 이상), 갈등조정회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갈등관리지원센터 운영, 갈등관리 혁신포럼 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청와대 합동 갈등관리 워크숍 정례적 개최 등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의 구성·운영을 비롯하여 '갈등관리 연구팀(동아리) 운영, 갈등관리 바랍희 개최 추진, 자치단체공무원 갈등관리 전문교육 강화,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자치단체 관계공무원 교육·워크숍 실시 등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